

“투표·득표율 90% 달성”… 광주·전남 성사되나

NEW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민주당 텃밭서 선대위 이어 지자체도 ‘적극 행정’ 동참 호남 정치적 위상 복원 시도… 정치인 ‘치적쌓기’ 지적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 주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 달성을 위해 조직과 인력 을 총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광역단체장과 기 초단체장, 교육감까지 나서 역대 최고 투 표율을 위한 적극 행정에 동참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의 ‘투표·득표율 독려’ 행보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확고한 결집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약해진 지역의 정 치적 위상을 복원하기 위한 ‘호남 역할론’ 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전남도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공 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 득표율 목 표를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투표율 목 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5%p 높은 85% 로 제시했다.

양부남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출정식 에서 “6월 선거는 내란종식·민생회복과 경제 성장·국민통합 및 사회 갈등 해소라 는 3대 과제를 완수할 능력을 가진 지도자 를 뽑는 날”이라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진짜 대한민국을 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장을 비롯 해 광주 5개 구청장과 교육감 등은 ‘역대 최고 투표율인 92.5% 달성’을 목표로 내 걸었다.

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 임택·김이강 ·김병내·문인·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12일 광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 거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 92.5%를 향해 힘껏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시 민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 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의 모범이 됐다”며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투 표율인 92.4%보다 높은 투표율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이들은 “더 많은·더 편한 투표 참여’ 를 위해 6개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거소투표소를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 곳에 설치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 권을 보장하기로 했고, 청년층 투표 참여 를 높이기 위해 광주 18개 대학 총장·총학 생회를 중심으로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해 경제 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와 산 업단지를 찾아 적극 권유하고, ‘생애 첫 투 표 캠페인’을 전개해 고3 학생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한다.

아울러 투표 참여 시민에게 광주소상공 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과, 음식, 커피 등 생활밀착형 업체의 할인 이벤트를 운영하 고 오월 광주 나눔 세일에 참여한 49개 업 체와 연계해 투표 빵 판매도 진행한다.

다만 이들은 선거법상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제한된 단체장들은 득표율 목

표치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이 투표율과 득표율 에 의미를 두는 것은 호남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권 이 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확고한 결집으로 존재감을 다 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갈수록 약해지고 존재감마저 미미해지고 있는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특 정 정당 및 후보를 겨냥한 ‘유권자 동원’이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이 투표·득표율 목표에 집착 하는 것은 텃밭인 호남의 정치적 위상 변 화에 대한 위기감도 있지만, 정치인 개개 인의 차기 지방선거나 총선을 위한 ‘치적 쌓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쳐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투 표에 참여해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 (노태우) 92.4%, 14대 (김영삼) 89.1%, 15 대 (김대중) 89.9%, 16대 (노무현) 78.1%, 17대 (이명박) 64.3%, 18대 (박근혜) 80.4%, 19대 문재인 (82%) , 20대 (윤석열) 81.5%로 17대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투표 율을 보였다.

장승기 기자 sky@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근로자·소상공인 투표참여 보장약속’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경제계, 근로자 투표 참여 환경 조성

‘6·3대선’ 기업·단체와 투표권 보장 협력체계 등 강화 강기정 시장 “적극행정…더 많은 시민이 더 편히 투표”

광주시가 지역경제계, 기업들과 함 께 근로자의 투표 참여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섰다.

광주시는 13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 관 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근 로자·소상공인 투표참여 약속’을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들이 사전투 표 (5월 29~30일) 나 본투표 (6월 3일) 에 불이익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는 데 뜻이 모아져 마련 됐다.

행사는 광주시와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하남산 업단지관리공단, 하남·광동·철단산단 협의회 등 기업 및 유관 단체 대표 22명 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의 주권행사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근로자의 투표권 적극 보장, 근로자 사전투표 (5월 29~30일) 와 본투표 (6월 3일) 자 유롭게 참여 분위기 조성,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 투표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공동체 발전 기

여 약속 등 실천사항을 결의했다.

광주시는 이번 약속을 통해 민주주의 가 일터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유 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민주적 가 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 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산업·경제 등 광주의 미래 비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라며 “특히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평일인 만큼 기업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광주시도 시 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겠다”고 밝 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민주 265억·국힘 243억·개혁신당 1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 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523억 832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65억3146만 9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554만2780원 등이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

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 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산단 가 (1183원) 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 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 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 를 배분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 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각각 지급한 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문수, ‘출산 가산점’ 논란에 선대위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 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 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 은 데 책임을 지고 13일 민주당 중앙선대 위 위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개 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 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 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

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답변이었으나 표 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며 “정치인의 맡은 사직이든 공직이든 늘 신중해야 한다 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전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민 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 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고용·돌봄·범죄 피해 대책 등 분야별 여성정책 공약을 조 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 재명 대선후보가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 에는 ‘군 복무 경력 후보 반영’이 포함된 반면, 여성정책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여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김 의원은 한 지지자의 항의 문자 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 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대선 투표 참여 적극 권장”

국고 확보 부처 소통 강화·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5월은 굉장 히 중요한 달이다. 국민이 가고자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투표 참여를 적극 권 장하고, 국고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국가적 혼란과 비상상황을 극복하

고, 경제도 다시 회복을 해서 새로운 대한 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며 “전 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손발을 잘 맞춰 도 민의 대선 투표 참여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 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이 국 고 확보를 위한 적기”라며 “현재 시기엔 중

양부처의 실국장, 과장급에서 결정권을 쥐 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다. 이들을 중 심으로 국고확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전남 예 산이 많이 반영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며 “모든 실국의 사무관부터 과장, 실국장 등이 직접 현안업무를 챙겨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제출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에도 많은 정부 공 모사업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더 능가하도 록 모든 공모 참여 사업을 총괄 관리토록 하 라”고 지시했다.

박정렬 기자 hobul@

사람과 도시

그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설치 의무화)
기초공사기 필요 없이 공사비 절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전용(7기종만족)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 저류 침투조

· 블록형 경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 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물러 가이드레일, 개방형 가이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주) 한길산업
www.hngroad.co.kr

본 사 1(공정) 전남 영광군 해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공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15)로 172 한림유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